

“아특별법 연장으로 ‘亞문화중심도시 광주’ 완성”

광주시, 문화중심도시특별법 연장 국회 토론회 개최
조성사업 종료 3년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과제 점검
아특별법 연장·국비확대·전담조직 강화 방안 등 제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법)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종료가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기를 연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별법 연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료를 3년 앞두고 사업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아특별법 연장 등 지속가능한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별법 연장’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남은 사업 기

간은 3년뿐이지만, 2024년 기준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투입률은 30%에 머물러 있고 사업의 중심적인 조성위원회는 2022년 이후 구성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특별법 연장, 국비 지원 확대, 전담조직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을 중단 없이 완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로서 광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은 맡아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이 참여해 조성 사업 성과와 과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욱 선임연구원은 “ACC, CGI센터, GCC, G.MAP 등 문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생태계가 확장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성과를 확산해 아시아문화중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별법 연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심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특별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훈 센터장은 “이 사업은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명시한 유일한 국제 문화사업이다”며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5대 문화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특별법에 규정된 국비 보조율 상향(50→70%)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운 전남대 교수는 “3.0시대 전환을 위해 국가와 광주시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참여 기반을 체계화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AI시대 흐름에 맞춰 5대 문화권의 문화 동력 확장과 국가 주도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토론자, 참석자들은 “민·관·정이 힘을 모아 2028년 계획 종료를 앞둔 아특별법을 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광주가 대한민국 문화분권의 상징도시이자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으며 손팻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영문 시 문화경제부시장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담아 시작된 국책사업이다”며 “아특별법 연장을 통해 광주가 세계 문화를 연결하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필수농자재법 통과…국가책임농정 뒷받침”

전남도 지속적 노력 결실…정부 정책지원 요청 지속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통과됨에 따라 “국가책임농정시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전남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환영했다.

필수농자재법은 비료, 사료, 농업용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가 적어 공급망 위험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인산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핵심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나 재생에너지 활용 농가에 우대지원이 가능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위기대응 단계별 지침 마련,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로 농자재 가격 급등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농업인의 어려움에 국가가 비



로소 함께 책임지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

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을 시작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김 지사는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게 된 만큼 매우 뜻깊은 결정이다”며 “그동안 국가책임농정을 꾸준히 요구해 온 전남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며 “시행령과 지침 마련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필수농자재 안정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실히 마련되고, 이번 법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무안군, 공항 이전 대응 실무반 가동…협상 본격화

민간공항 先 이전 등 3개 요구안 부서별 역할·과제 분담

정부 주도 아래 광주·군·민간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전 대상지인 전남 무안군이 정부 중재안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30일 무안군에 따르면 대응 실무반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미래성장과장이 총괄을 맡아 공항 이전과 직결된 부서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실무반은 군이 제시한 3대 전제조건인 △광주 민간공항의 선(先) 이전 △광주시의 약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시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역할과 대응 과제를 나눈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선 이전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국방부와 공

동합의서를 공식 문서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규모 주민 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원금 보증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 신규 사업 발굴을 병행할 방침이다.

무안군은 특히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핵심”이라고 보고 정부에 주요 사업을 건의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의 대상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단 조성, 인공지능(AI) 기반 첨단농업 복합지구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무안 삼향~영암 대불 간 도

로 신설 등 SOC 사업,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이 포함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는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대통령실 직속 TF에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했지만, 무안군이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논의가 잠시 멈춘 상태였다. 정부가 최근 무안군의 요구를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세 지자체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TF는 12월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ews1@munan=이훈기 기자 leek2123@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이대통령, 국토 1차관에 여수출신 김이탁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방종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사진)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김 교수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지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묘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



여수 출신인 김 선임 차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5국3특’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균형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알림

광남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취재경력기자 및 관리직 모집…5일까지 접수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전남지역의 대표 정론지 광남일보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원하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남일보는 그동안 비주얼 편집을 통해 ‘보는 신문’의 새 지평을 열며 독자와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역 최고의 미디어 플랫폼을 꾸리는 광남일보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과 패기 넘치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기다립니다.

- 모집대상** : -경력기자 : 0명 (취재)
-지역기자 : 곡성군(1명)
-광고사업독자팀 : 수습 (1명)
- 응시자격** : -언론사 (일간지 및 월간지 등) 근무 경력자 (기자직에 한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2차 : 심층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함·합격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면허증(소지자에 한함)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기자직에 한함)
- 서류접수** : -접수기한 : 2025년 12월 5일 (금)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이메일접수 (design@gwangnam.co.kr), 광남일보 홈페이지 (gwangnam.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접수처 및 문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4층) 광남일보 총무국 ☎ 062-370-7093)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

기재위 소위서 합의…최고세율 30% 세제개편안 추진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다만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세제개편안의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성오 기자

홍콩 당국 “아파트 화재 사망 146명으로 늘어”

공식 애도기간 선포

지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사망자가 30일 기준 146명으로 늘었다. 홍콩 당국은 29일부터 사흘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북부 타이포의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월 폭 코트’ 7개 동에서 43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당국은 이같이 밝혔다. 애도 기간 관공서에는 중국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 조기가 게양되고, 정부가 주최·후원하는 공연 등 각종 기념행사는 연기·취소된다.

홍콩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3분간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했고, 시민들을 위한 조문소를 만들고 조문록을 비치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도 조문 메시지를 내놨다.

홍콩 당국은 온라인상의 유언비어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실종자가 가운데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